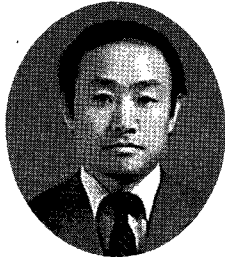


原子力行政體制의 再定立



강 창 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우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차원의 원자력행정업무의 재정립을 바란다. 새로운 정부는 동력자원부를 없애고 상공부와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로 개편하였다. 이 개편을 계기로 각 정부부처간에 산재하고 있는 원자력에 관한 행정업무를 재조정하여 그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본다.

원자력발전은 물론 핵연료주기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 제반 원자력사업에서 각 부처는 정부로서의 행정적인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연구계의 전반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이 재정비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행정업무를 재정립해 줄 것을 바란다.

多元化한 行政體制

그렇다면 우리 원자력행정체제의 현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는 원자력법이 있다.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자력법은 과학기술처의 원자력실이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를 두고 있다.

원자력은 또한 그 다양성 때문에 과학기술처 뿐만 아니라 범부처적

으로 관련되어 있다. 發電 및 핵연료 확보 등 에너지행정에서 동자부가, 시설투자 및 국산화 등 산업행정과 수출입 및 시설도입 등 무역행정에서 상공부가, 기술협력 및 핵확산 등 외교행정에서 외무부가, 자금확보 등 투자행정에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인력수급 및 홍보교육 등 문교행정에서 교육부가 이밖에 환경처, 보사부, 농수산부가 환경, 의료, 농수산 측면에서 그리고 내무부가 비상계획 측면에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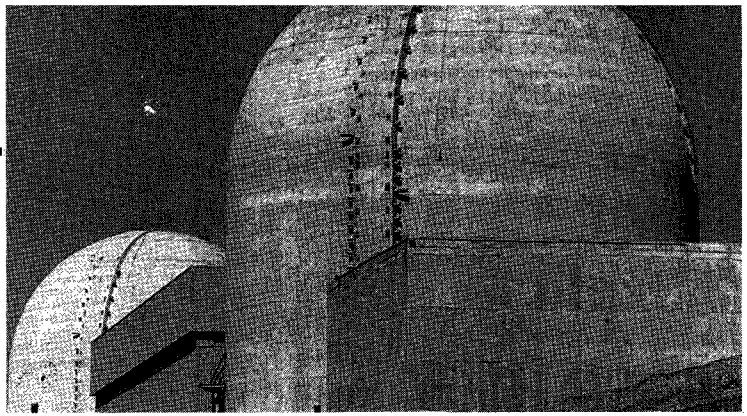
원자력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기본법 및 한전법 등에 따라 아직까지 동력자원부 전력국의 원자력발전과가 감독하여 왔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사업에서 행정업무가 동력자원부와 과학기술처 사이에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추진과 기술자립면에서 두 부처가 상충된 의견을 보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원자력사업의 發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행정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국가 차원에서 장기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으로서 확정하는 것이다. 모든 업무추진에 앞서서 확고한 정책이 수립되고 이 수립된 정책에 따라 그 이후의 제반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다. 원자력 관련정책 수립의 내용으로서는 장기전원계획, 신규 원자로형의 선택 및 기술자립, 우리나라 장기확보, 핵주기기술 확립, 경제성 향상, 안전성 증진,

중장기연구개발, 원자력의 이용 확대, 방사성폐기물 처분, 원자력시설 부지확보, 해외협력, 국민합의 도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 정부 차원의 업무로서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 및 인허가가 있다. 안전규제와 인허가는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는 필수 불가결한 업무이다. 정부는 독립적인 규제를 통하여 방사선에 의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대중 및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안전규제 및 인허가관련 정부의 업무내용으로서 원자력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인허가업무와 이에 따른 검사업무가 포함된다. 그리고 운전중에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 검사 및 감독 업무, 방사선평폭에 대한 관리업무 등이 업무내용에 포함된다.

셋째로 정부의 업무로서 원자력 관련 산업체의 육성, 감독, 관리, 업무조정 및 지도가 있다. 원자력 사업은 여러 기술이 총체적으로 관련되므로 기술자립과 관련하여 산업체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도가 필요하다. 원자력관련 산업체에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는 전력회사, 발전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산업체, 원자력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용역회사 및 건설회사 등이 있다. 그리고 핵연료주기사업과 관련하여 핵연료 가공업체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업체 등이 있으며 비전력 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동위원소 및 방사선원 공급 및 이용사업 등이 있다.



마지막 정부의 업무로서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종합조정 및 지원업무가 있다. 국가의 중장기연구개발정책에 맞추어 원활한 연구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원자력관련 연구가 국가출연 산업체 및 연구소는 물론 학계에서 수행되고 있다.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조정과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行政監督 一元化되어야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공급의 50% 가량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원자력의 계속적 이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원자력은 우선 발전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자립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환경문제를 완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도 과학기술의 총집결체인 원자력기술을 기능별로 계열화하여 기술자립을 성취하고 그리고 현명한 국산화를 통하여 원자력의 경제성을 계속해서 증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방대한 투자를 요하는 원자력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기술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일사불란한 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산업체는 자유경쟁체제의 확립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는 반면에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안전

규제체제를 확립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종합적 정책수립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강력한 추진체제의 확립」은 원자력행정업무 정립을 위한 기본방향이라 하겠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한다면, 첫째 원자력행정업무는 일사불란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한 부처에 일원화하고, 일원화 담당부처는 원자력발전사업을 감독하는 부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안전규제를 위하여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 및 인허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하여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한다.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 에너지자립의 핵심인 원자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재정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 차원의 업무정립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옷을 바로 입기 위해서는 첫번째 단추부터 바르게 끼워야 할 것이다. ▣